

“여야, 비축유 확대·원유 도입선 다변화 등 초당적 협력”

중동상황 대응·극복 긴급회의

민주 “힘모아 위기 반드시 극복”
국힘 “韓, 스태그플레이션 국면
차량 5부제 등 탁상행정 재검토”

여야가 16일 정부와 함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상황 극복 및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민생·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협치 의지를 다졌고, 비축유 확대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함께 정부로부터 현안을 직접 보고받고 공동으로 대응을 점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위기를 여야가 공동의 국정 책임으로 인식하고 정쟁이 아닌 민생으로 답하겠다는 실천 의지”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면 야당의 제안에 따른 입법과 예산 어느 측면에서든 초당적으로 협조·협력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상황 대응·극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 긴급 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한 원내대표, 송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시스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점에서도 정부·여당과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큰집인 민주당부터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의 성

격을 경기 침체로만 진단하고 있다 보니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방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 환율 안정 대책 마련 ▲ 석유 최고가격제 등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 재검토 ▲ 차량 5부제 등 탁상행정 재검토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국회가 충분한 협의보다는 의석수에 따라 일방적으로 운영돼온 측면이 있었다”며 “이 자리가 협치를 복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를 계기

로 여야정 간 상시적인 소통 체계도 구축해야 된다”며 “정파적 이해를 떠나 민생 구하기라는 공통의 목표 아래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보탰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등이 차례로 중동 전쟁 상황과 범정부 대응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 여야정은 약 20분간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부족과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축유 확대 추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중동산 원유뿐 아니라 비중동산 원유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유사가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초당적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산업부 차관에게 지금 비축유로 원활하게 정유사 수유를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향후 비축유를 확대하고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의했고,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비중동산 원유는 러시아산도 포함인 가라는 질문에 문 원내대변인은 “남미, 아프리카 등 (수입선)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러시아산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정 회의)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metroseoul.co.kr



“최고가가격제 후 휘발유·경유 소비 줄어”

산업부 ‘소비 확대’ 주장 정면반박 원유 안정적 보장, 수급 우려 선그어

정부가 지난달 13일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해 소비가 늘고 시장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가 소비자들의 가수요를 부추겼다는 지적과 달리, 실제 소비량은 전년 대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주유소 판매량 수치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첫째 주 대비 4월 둘째 주의 주유소 판매량은 휘발유 13.8%, 경유 10.1% 등 전체적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총 판매량은 255만 2000kl로, 지난해 같은 기간(269만 1000kl)보다 12.4% 줄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보장실장은 브리핑에서 “3차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동결한 이후 석유제품 소비가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판매량을 보면 휘발유는 1.8%, 경유는 7.6% 판매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 넷째 주에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던 이유에 대해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가격 인상을 우려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실장은 “최고가가격제로 인해 석유제품 소비량이 증가했고 판매량이 늘었다는 논란에 대해 확정적으로 줄었다 또는 늘었다고 말하기에 앞서 판매량이 증가한 기간을 빼서 비교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서도 정부는 선을 그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4개국을 방문한 대통령 특사단이 확보한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는 연말까지 안정적인 도입을 보장받은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양 실장은 “강한식 비서실장이 발표한 2억 7300만 배럴을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까지 감안해서 연말까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 확답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며 “대체 원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축유를 활용한 스와프 활동도 진행되고 있어서 4~5월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사태로 4~5월 에 안 들어오는 물량도 있고 6월부터는 선적이 계약대로 이행될지 불안감이 있었는데, 특사단 활동을 통해 사우디 에너지 장관과 아랍오 이사장에게 협력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



李, 英·佛 주도 호르무즈 화상회의 참석할 듯

청와대 “대통령, 긍정적 검토 중
오늘 저녁 시작, 여러나라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영국·프랑스 정상 주도로 열리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에 대해 “이 대통령의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여는 이번 회의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저녁에 시작된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시간은 내일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녁때 시작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며 “여러나라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과 안전 통항은 우리 국익에도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며 “유럽 및 아시아 여러 나라와 함께 연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미국도 함께 공조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사태에 대한 입장,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호

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간 정상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회의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강조하는 의장 성명을 낼 방침으로, 결과 문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다만 합의문이 채택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회의 참여 규모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30~40국이었으나 현재 국제기구를 포함해 (초청국) 70~80국으로 숫자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데 대해 “미국이 빠진다고 해서 배제라고 해석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번 국제연대 틀에서는 빠져 있지만, 영·불과 소통하며 공조하에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관과 직접 협상을 하기보다는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의 조속하고 안전한 통항을 위해 이관과의 소통도 지속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



물가-성장목표 상충시 ‘물가 중점’ 취지

>> 1면 ‘금리 동결, 현 상황...’서 계속

◆ 2차 파급 오면 통화정책 역할

신 후보자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 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이른 국면”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공급충격이 오래 지속돼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때는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금리를 건드릴 단계가 아니지

만, 물가 충격이 일시적 수준을 넘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지면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한다는 조건을 분명히 했다.

이 지점은 신 후보자가 단순한 동결론자가 아니라, 물가 충격의 전달 경로와 지속성을 보면서 대응 강도를 정하겠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을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정책 선호)’로 규정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물가와 성장 목표가 상충할 경우에는 물가에 중점

을 두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성장 둔화 우려가 있더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이 더 보수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이창용 체제의 최근 동결 기조를 잇되, 그 위에 ‘물가 2차 파급 시 대응’이란 보다 분명한 조건을 엿었다는 점에서 연속성과 차별성을 함께 나타냈다. 당장 금리 방향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정책 판단 기준이 성장 둔화 그 자체보다 물가의 질적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社告

- ② 일자 : 2026년 5월 19일(화)
- ③ 장소 : 메트로경제 본사 3층 회의실
- ④ 기타 : 면접 시간은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2026년 5월 22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 인사담당자(☎02-721-9851)로 문의 바랍니다.

